

■ 논문 ■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

이 용 일

I. 새로운 독일 중산층의 탄생?

이주민과 난민 유입으로 야기된 인종주의적 이방인 혐오와 집단적 폭력이 유럽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나치 홀로코스트의 과거로 인해 인종차별과 인종주의가 오랫동안 사회적 터부가 되었던 독일사회에도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집단적, 인종적 혐오와 차별, 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다. 2017년 독일 연방의회선거, 2018년 유럽의회선거, 2019년 지방선거에서 ‘반난민’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하 독일 대안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¹⁾ 거대한 외국인인구의 유입을 가져왔던 2015년 ‘난민위기’가 반이민정서의 고조와 극우정당의 득세에 결정적인

* 본 연구는 2019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2017년 10월에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 대안당은 12.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일약 제 3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독일 대안당은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한 최초의 극우정당으로 기록되었다. 2018년 5월 유럽의회선거에서도 독일 대안당은 11%를 얻으며 약진을 이어갔다. 최근 치러진 구동독지역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그 성장세가 더 두드러졌다: 2019년 9월 작센주 선거(27.5%, 2014년 선거 대비 17.8% 상승), 2019년 9월 브란덴부르크주 선거(23.5%, 2014년 선거 대비 11.3% 상승), 2019년 10월 튀링겐주 선거(23.4%, 2014년 선거 대비 12.8% 상승).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²⁾ 사실 독일사회로의 난민유입은 2015년 89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새로운 외국인 증가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난민위기 직전인 2014년 8백 15만 명이었던 독일의 외국인인구는 2018년 3월 현재 2백 57만 명 늘어난 1천 7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³⁾ 위협적일 만큼 가파른 뉴커머의 증가세는 독일사회의 수용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를 집단적 미움과 혐오의 감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난민위기 이전에도 독일사회에 외국인혐오와 반이민정서가 팽배하게 퍼져있었다. 2010년 출간되어 1천 5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티로 자라친의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Deutschland schafft sich ab)』의 성공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계속 독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과 난민들, 그리고 우둔한 이주민 2,3세대의 증가와 독일인들의 출산율 저하로 자랑에 마지않던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독일인들의 나라’가 망해가면서 독일인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풍요 역시 사라질지 모른다는 독일인들, 티로 자라친의 말을 빌리자면, 독일 중산층 시민(Bürgliche Mitte)의 불안감과 분노가 이 책 속에 담겨있다.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혐오와 폭력의 문제에 천착했던 독일 빌레펠트 대학의 사회학자 빌헬름 하이트마이어(Wilhelm Heitmeyer) 역시 오랜 경험연구를 통해 독일 중산층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확인하며, 그것을 “천박한 시민성(Rohe Bürgerlichkeit)”으로 명명했다.⁵⁾ 고삐 풀린

2)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 Zentrale Ergebnisse* (Nürnberg, 2016), p. 2.

3)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2017. Asyl, Migration und Integration* (Nürnberg, 2018), p. 107.

4)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Wie wir unser Land aufs Spiel setzen* (Mü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2010); 이용일, 「독일의 뉴라이트와 복지국가위기론 -티로 자라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서양사론』, 129권(2016), 77-204쪽.

5) Wilhelm Heitmeyer, “Rohe Bürgerlichkeit. Bedrohungen des inneren Friedens”, *Wissenschaft & Frieden*, 2(2012), pp. 39-41.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통제력을 잃은 정치권, 그 결과로서 심화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중산층의 약화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주민들과 난민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⁶⁾ 빌레펠트대학의 집단적 폭력 연구팀은 2006년부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던 중산층 연구팀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9년 봄 공동작업의 결과물을 『잃어버린 중산층 - 적대적인 상황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기성정당에 등을 돌리며 외국인 혐오와 테러를 정당화하는 극우정당의 지지자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그 속에 담겨있다. 이러한 중산층의 극우화는 독일 민주주의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 “천박한 시민성”의 확산을 막고 좀 더 포용적인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성 교육의 재고가 요청되는 이유인 것이다.⁸⁾ 이에 반해 자라친은 과거 독일 시민사회의 정치문화가 이주현실을 우려하는 중산층의 건전한 자기주장을 인종주의와 극우주의로 몰아갔다고 비판한다. 소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맞서 중산층 시민들은 이주와 난민으로 인해 파생한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독일 정치문화의 강화가 되었던 그것의 폐지가 되었던, 이 두 진영이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전후 독일사회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하나의 범주로 묶기 어려울 만큼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입국시기와 체류기간도 다르고, 통합의 정도와 의지, 문화와

6) Wilhelm Heitmeyer, “Rohe Bürgerlichkeit. Zur Verteilungsdebatte: Von Abstiegsangst getrieben zetteln Bessergestellte einen Klassenkampf von oben an.”, *Zeit Online* (2011.9.22.). <https://www.zeit.de/2011/39/Verteilungsdebatte-Klassenkampf> (최초 검색일: 2019.6.20.).

7) Andreas Zick, Beate Kupper, Wilhelm Berghan ed.,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 Rechtsextreme Einstellungen in Deutschland 2018/19* (Dietz, J H: Bonn, 2019), p. 11.

8) *Ibid.*, pp. 295-296.

9)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pp. 391-392.

종교, 가치관과 세계관, 학력과 재산정도, 연령대도 제각기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독일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자(Personen mit Migrationshintergrund)’라는 집단적 범주에 묶여 동일시되곤 한다. 2005년 독일 인구센서스 통계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 개념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는 일국적 경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이주배경을 가진 자는 스스로 또는 부모중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독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총칭한다.¹⁰⁾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독일사회에 뿌리내리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통합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주경험이 계속적으로 소환되며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 오용되어진다. 주류적 시각은 이주민들이 처음 정착지 사회에서 출발했던 지점, 즉 가장 밑바닥(Ganz unten)에 머무르곤 한다. 상층회로를 통해 들어온 엘리트 이주자들이 독일사회에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개의 이주자들은 장벽이 높은 한시적인 하층회로를 통해 처음 입국했던 외국인노동자들과 난민들이었다. 중산층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이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주류사회가 이주민 내지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10)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18-* (Wiesbaden, 2019), p. 4: 이주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고 독일서 태어난 외국인, 이주하거나 이주하지 않은 귀화인, 러시아로부터 귀국한 해외동포, 입양을 통해 독일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귀화인/해외동포/입양인의 독일국적 자녀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1945년 이후 독일로 이주해 들어왔지만 혈통적, 문화적 이유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부류도 있다. 1천 2백만 명에 달하는 피추방민과 외국에서 태어난 독일국적자로 부모 모두가 이주배경을 가지 않은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주시기만이 아니라 혈통적, 문화적 요인이 여전히 이주배경을 가진 자와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자를 나누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구 소련연방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들어온 해외동포 입국자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개 본국과의 오랜 단절과 현지와의 혼종과정 속에 문화적인 동질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자들이었다. 어쨌든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개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오랜 이주과정을 통해 이미 구분하기 어려운 혼종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주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은 이방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들은 그저 집단으로 인식되어질 뿐이다. 그것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전형적인 시각이다. 독일문화를 사랑했고, 독일인이라 스스로 생각했지만 유대인이라는 범주에 묶여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가스실로 보내어졌던 독일 시민 교양층 유대인들 역시 이러한 시선의 희생자들이었다. 이 시선은 독일 이주현실을 잘못 읽게 만든다.

독일에 들어와 길게는 50년, 짧게는 20년 이상 독일사회에 정착하여 살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제 막 들어온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과 함께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범주에 묶여 여전히 독일사회의 부를 값아 먹고 있는 기생층 정도로 여겨진다. 통합 되었음에도, 여전히 독일사회는 그들에게 통합 될 것을 요구한다. 몇몇의 성공한 이주민들은 독일의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쩌면 독일 중산층의 위기는 독일 중산층이 독일문화, 독일인이라는 민족적 패러다임 속에 묶여질 수 없는 다양하면서 이질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서 동일한 지분을 요구하는 이주민들의 존재가 기존의 중산층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사회적 분노와 미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차별적 시선은 트랜스내셔널 전환기 독일사회에서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후 독일사회가 추구했던 구성원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포용과 그것에 기반 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인구의 4분의 1이 문화적, 혈통적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집단적 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적이지도, 능률적이지도, 포용적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자 문제의식이다.

II. 포용적 중산층 시민사회와 외국인노동자의 긍정적 기여

극단적 민족주의로서의 나치즘이 남긴 상처 위에서 출발해야

했던 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로 각인되었다. 무엇보다 독일역사에서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었던 민주주의가 독일연방공화국에서야 비로소 만개하게 되었던 것은 전후 독일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러한 자긍심은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체성정치의 핵심이 되었다. 정치학자이자 저널리스트 돌프 슈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가 처음 만들고, 하버마스가 확산시켰던 대안적 정체성 개념인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역사에서 민족은 언제나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을 통합하는 충성심과 애국심의 발로가 되었는데,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잘 작동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과 제도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는 것이다.¹¹⁾ 성숙하고 비판적인 행위주체로서 시민의 존재는 이러한 헌법애국주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시민은 법적 권리의 수동적 담지자만이 아니라 협상과 합의를 통해 헌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능동적 창조자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 규범, 제도, 정치문화는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들이 투쟁하고 협상하며 만들어내는 역사적 기획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부재했던 독일 역사에서는 영미의 citizen과 프랑스의 citoyen와 같은 공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다. 시민으로 번역될 수 있을 독일어 Bürger는 공민적 성격보다 부르주아라는 계급적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 전후 독일 사회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했던 슈테른베르거가 독일사회에서 부르주아가 소멸되어야만 시민성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¹²⁾ 실제로 전후 독일사회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의 종말(Ende des Bürgertums)”이 널리 회자되었다.¹³⁾ 그럼에도 계급성을 배제한 새로운 시민성, “부르주아 계급성 없는 시민성(Bürgerlichkeit ohne

11)Dolf Sternberger, *Verfassungspatriotismus* (Frankfurt am Main: Insel, 1990), pp. 17-31.

12)Dolf Sternberg, “Die Bürgerlichkeit”, *Die Wandlung* 3. Jg. 1948 Heft 3, pp. 199-200.

13)Jens Hacke, “Bürgerlichkeit und liberale Demokratie”, Gunilla-Friederike Budde, Eckart Conze, Cornelia Rauh ed., *Bürgertum nach dem bürgerlichen Zeitalter: Leitbilder und Praxis seit 19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p. 117.

Bürgertum)”은 독일사회에서 실현될 수 없었다. 독일사회에서 시민은 여전히 부르주아 계급성을 띠었고, 민족이나 국민을 대신하는 개념이 되지도 못했다. 시민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읽혔지만, 권위적이고 낡아빠진 부르주아 계급을 빗대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일상어에서는 중산층이라는 말이 부르주아 내지 시민을 대신하게 되었다.¹⁴⁾ 그럼에도 부르주아 계급은 소멸되지 않았고, 사회적 권리와 복지의 증대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중산층으로 확대되었다. 더 정확히는 과거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었던 노동자들과 하류층들이 확대되는 국가의 부와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부르주아 계급’으로 포섭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이제 폐쇄적인 부유층과 엘리트만이 아니라 대중을 포괄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중산층 시민으로 거듭났다. 이들이 바로 철학적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독일 시민사회의 주체가 되었다.

표1: 독일의 사회계층(자기진단, %)

	1955	1972
상류계층	2	1
상중류계층	-	8
중류계층	43	51
노동자계층	49	38
하류계층	2	-
무응답	1	2

출처: M. Rainer Lepsius, *Demokratie in Deutschland: Soziologisch-historische Konstellationsanalys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p. 163.

14)Christine G. Krüger, “In der Tradition der bürgerlichen Wohlfahrt? Freiwillienarbeit von Jugendlichen nach 1945”, Gunilla-Friederike Budde, Eckart Conze, Cornelia Rauh ed., *Bürgertum nach dem bürgerlichen Zeitalter: Leitbilder und Praxis seit 19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p. 53.

표2: 독일의 고용구조(1950-1975, %)

	자영업자	공무원	사무직	노동자
1950	29,2	4,0	16,0	50,9
1961	22,0	5,8	24,2	48,0
1965	20,0	5,0	26,3	48,6
1970	16,0	7,3	31,1	45,6
1975	13,9	8,4	33,6	44,8

출처: Heinz Sahner, "Sozialstruktur und Lebensla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scar W. Gabriel, Everhard Holtmann ed., Handbuch Politisches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ldenburg, 2005), p. 76.

위의 사회계층에 대한 설문과 고용구조는 전후 독일사회가 “평준화된 중산층사회(Nivellierte Mittelstandsgesellschaft)”¹⁵⁾로 변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5년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노동자계층으로 생각했던 독일인들은 전체 응답자의 49%였지만, 1972년에는 응답자의 38%만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분류했다. 같은 기간 중류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독일인들의 비율은 45%에서 60%로 대폭 늘어났다. 노동자 정체성을 밝힌 38%의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할 만큼, 평준화된 중산층사회가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래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1972년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한 독일인들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¹⁶⁾

고용구조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공무원과 사무직이 1955에서 1975까지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게 되는데, 1955년 50,9%에서 1975년 44,8%로 그 낙폭이

15) Helmut Schelsky, "Die Bedeutung des Schichtungsbegriffs für die Analyse der gegenwärtigen deutschen Gesellschaft", Helmut Schelsky, *Auf der Suche nach Wirklichkeit. Gesammelte Aufsätze* (Düsseldorf, Köln: Eugen Diederichs, 1965), p. 332.

16) M. Rainer Lepsius, *Demokratie in Deutschland: Soziologisch-historische Konstellationsanalys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p. 163.

크지는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거의 1천 4백만 명 이상 모집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무직으로, 공무원으로, 기술적으로 계층 상승해 버린 독일인들의 빈자리를 메워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대개 작업환경이 나쁘고,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의 단순직에서 일했다. 1966년과 1967년 사이 경기침체기 대량실업사태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24,5%가 감소했던 반면, 독일인노동자의 감소율은 2,5%에 그쳤다.¹⁷⁾ 1973년부터 시작된 대량실업의 시대에 외국인노동자들의 경기완충작용(Konjunkturpuffer)은 더욱 빛을 발했다. 물론 이 시기 독일인노동자들 역시 대량실업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내국인노동자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¹⁸⁾ 위기의 시대 독일인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극한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외국인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존재는 독일 경제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였다. 완전고용의 시대 이들이 없었더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 포용적 복지국가와 풍요로운 중산층사회의 확산, 교육기회의 확대와 여가시간의 증대가 노동시장의 고갈로 인해 저해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기계화와 자동화 같은 기술혁신이 타개책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해법으로 당대인들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을 것이다. “토요일에 아빠는 내 것(Samstags gehört Vati mir)”¹⁹⁾이라는 1950년대 독일 노동자들의 투쟁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17) 이용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 인력모집정책: 대기업 중심의 독일식 대량생산을 위한 대규모 외국인고용 1955-1973」, 『서양사론』, 85(2005), 195쪽.

18) 1974년 내국인 실업률이 전년대비 104%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 실업률은 무려 228% 더 늘어났다. Hans-Uwe Bach i.a., “Der Arbeitsmark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5/76 (insgesamt und regional) und die Auswirkungen beschäftigungspolitischer Maßnahme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Sonderausgabe, 9. Jg., 1976), p. 55.

19) Michael Schneider, “Der Kampf um die Arbeitszeitverkürzung von der Industrialisierung bis zur Gegenwart”,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35(1984), p. 87.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토요일 휴무제의 도입과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이 1960년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충분한 인력충원 덕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큰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 성장이 가져다주는 복지와 경제적 풍요로움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고 믿는 독일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도 거대한 노동이민의 덕이었다. 포용적 중산층 시민사회의 확대가 독일 민주주의의 보루였다고 한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의 기여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기여를 독일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1960년대에 이주노동자들이 독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역군으로 추켜세워진 적도 있었지만, 이들의 정주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부터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사실 천4백만 명 가운데 천백만 명은 노동계약의 종결이후 고국으로 돌아갔다.²⁰⁾ 남은 자들, 즉 이주민이 된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있는 독일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외국인모집종료 직전인 1973년 1월 정부성명에서 당시 독일총리 빌리 브란트는 사회적 이성과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독일사회가 이미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우리사회의 수용능력이 어디에서 소진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책임이 어디에서 한계치에 다다랐는지 아주 꼼꼼하게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²¹⁾

결국 그해 12월 외국인모집이 중지되었다. 이것은 한시적인 조치였고, 경기가 풀리면 다시 모집이 재개될 계획이었다. 이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집중지는 이주문제의 종결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의 이주문제는 이때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정부의 기대와는

20) Franz Nuscheler, *Internationale Migration. Flucht und Asyl* (Opladen: Leske+Budrich, 1995), p. 115.

21) Press-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ndeskanzler Brandt. Regierungserklärung des zweiten Kabinetts Brand-Scheel vom 18. Januar 1973* (Bonn, 1973), p. 46.

달리, 3백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독일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그들의 가족들과 친지들의 이주가 줄을 이었다. 자발적인 귀환을 독려했던 독일 정부는 사회적 책임 때문에 이주노동의 정주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독일인들과 이주민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독일 노동시장의 문이 해외인력에게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루트를 통한 독일로의 이주물결은 그치지 않았다. 3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난민물결과 구소련 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독일해외동포의 귀환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뉴커머들이 대규모로 들어 올 때마다, 독일사회는 국가적 수용능력의 과부하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곤 했다. 브란트가 수용능력의 소진을 처음 꺼냈을 때인 1973년 독일에는 3백 9십 9만 천명의 외국인들이 살았는데, 이것은 전체인구의 6,4%에 해당했다. 오늘날 독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규모와 비교한다면 이 수치는 수용한계를 넘어섰다는 호들갑을 떨기에 너무 소박해 보인다. 2018년 현재 독일 외국인수는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고(10 094 000명),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두 배 가량 늘어났다(12,2%).²²⁾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이주배경을 가진 자는 2018년 현재 2천 7십9만 9천명으로 집계되며 전체 독일인구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²³⁾ 독일사회는 이주민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고, 그렇게 들어온 트랜스내셔널 이주민들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주사회가 되었다. 이런 이주사회의 현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부정되었다. 당연히 이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 역시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들은 사회 밑바닥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생충 취급을 받았다.

민주적 법치국가와 그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 위에 형성된 헌법에국주의는 새로운 시민성을 요구했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의

22)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Ausländische Bevölkerung. Ergebnisse des Ausländischeryentralregiters* (Wiesbaden, 2019), p. 19.

23)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18-* (Wiesbaden, 2019), p. 35.

시민성은 여전히 종족성과 계급성 모두를 극복하지 못했다. 독일 시민이 되는 길이 이주민들에게 봉쇄되어 있었다. ‘독일인들’은 이주민들을 그들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들과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동등한 협상파트너, 즉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독일사회에서 사적, 공적 자율성 가진 ‘실질적인 시민’은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독일인이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중산층이상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주민들 가운데 사회 밑바닥에서 계층상승을 이루어내며 독일사회에 통합된 자들이 적지 않음에도, 이들의 존재는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집단적 범주에 묶여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랜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독일의 부를 갉아 먹는 자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새로운 이방인의 ‘침입’으로 그들만의 민족적, 계층적 공간이 침식되고 있다고 믿는 독일 중산층의 자기방어기제이기도 하다. 자라친과 그의 후예들은 “침식되고 있는 사회적 중산층(erodierende gesellschaftliche Mitte)”에서 발견되는 위기증상을 일찍 간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²⁴⁾

Ⅲ. 중산층의 위기와 집단적 혐오

서두에서 언급했던 2019년 중산층 연구팀의 책 제목이자 진단인 “잃어버린 중산층 -적대적인 상황”은 설문조사결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표 3의 집단적 혐오 지표는 지난 십여 년간 독일사회에서 ‘적대적 상황’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년부터 2018/19년까지 독일사회의 집단적 이방인혐오도는 34,5%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8,8%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무슬림혐오는 부침이 있긴 했지만 21,7%에서 18,7%로 줄어들었다. 인종주의 역시도 최근 하락세가 뚜렷하다. 단지 눈에 띄는 것은 난민혐오도의 고공행진이다. 처음 조사되었던 2011년 이미 47,4%였던 독일사회의 난민혐오도는

24)Richard Gebhardt, “Das >>Sarrazin-Syndrom<< Ein Bestseller als Krisenindikator”, *Das Argument*, 289(2010), p. 860.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

2018/19년 50%를 훌쩍 넘어 54,1%까지 상승했다.

표3: 집단적 인간혐오도(독일, 2002-2018/19)

	이방인혐오	난민편하	무슬림혐오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2002	34,5	-	-	12,2	12,7
2003	36,3	-	21,7	12,6	14,6
2004	40,2	-	23,5	11,5	14,6
2005	40,8	-	24,8	12,4	12,6
2006	40,7	-	30,3	12,8	8,4
2007	33,7	-	27,3	8,9	9,1
2008	30,6	-	24,7	9,6	8,3
2009	26,7	-	22,4	7,9	9,8
2010	29,6	-	29,0	8,2	9,9
2011	32,3	47,4	24,3	10,8	8,1
2014	20,0	44,3	17,5	8,7	8,5
2016	19,0	49,5	18,3	8,7	5,8
2018/19	18,8	54,1	18,7	7,2	5,8

출처: Andreas Zick, Beate Kupper, Wilhelm Berghan ed.,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 Rechtsextreme Einstellungen in Deutschland 2018/19* (Dietz, J H: Bonn, 2019), pp. 83-84.

이 설문조사대로라면, 독일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산층연구팀이 진단한 높은 난민혐오는 독일사회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 무엇보다 난민에 대한 혐오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설문문항들이 문제가 되었다: 난민인정에 있어서 국가는 더 관용적이어야 한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반반이다,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전혀 박해받지 않았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반반이다, 동의한다, 아주 동의한다).²⁵⁾

난민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누구나 극우주의자로 몰릴 수 있는 설문

25) Andreas Zick,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 pp. 72-73.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사민당 당수를 역임했던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의 비판은 같은 진영에서 나온 것이라 더 뼈아팠다: “실제로 외국인혐오자나 증오유발자로 느껴지고 논쟁에 얽매는 것이 두려워 이 연구를 문제 삼지 않으려 한다면, 소위 54%(난민혐오로 분류된)를 병자취급하며 그들을 잃어버린 중산층으로 몰아버리는 꼴이 되고 만다. 단지 누군가가 난민법에서도 질서와 원칙이 지배해야 하며 이 나라에 난민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머문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외국인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멍청한 것이다. 어쨌든 이 연구는 전혀 학문적이지 않다.”²⁶⁾

난민위기 이전에도 가브리엘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공동체의 정치문화에 근거한 해석지평 역시 계속 변모한다. 중산층 연구팀 역시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2016년 조사에서 “난민신청자가 자신들의 고국에서 박해받지 않았다” 또는 “독일은 난민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난민혐오 내지 이방인혐오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주장을 전혀 집단적 난민혐오 내지 이방인혐오와 연결시키지 않았다.²⁷⁾ 경쟁하며 합의하는 정치문화에 근거한 공동체적 해석지평이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된 두 개의 문항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도저히 알아 낼 수 없는 중산층 사회의 깊은 혐오와 미움의 결과물이었다.

자라친은 가면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 진실을 일찍부터 간파했다. 그는 독일 정치문화 속에 눌러 있는 독일 중산층의 분노와 미움을 자유롭게 분출시키려 했다. 그는 그것을 민족으로서의 건전한 자기주장이라고

26) Sigmar Gabriel, “Eine Studie und ihre bewusste Fehlinterpretation”, *Der Tagesspiegel* (2019.4.27.).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von-wegen-verlorene-mitte-eine-studie-und-ihre-bewusste-fehlinterpretation/24263736.html> (최초 검색일: 2019.10.17.).

27) Michael Kniess, “Rechtes Gedankengut in Deutschland- Studie: Der Mitte geht der Kompass verloren”, *ZDF Nachrichten* (2019.4.25.).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mitte-studie-die-wichtigsten-erkenntnisse-100.html> (최초 검색일: 2019.11.1.).

표현했다: “나는 민족일원으로서 건전한 자기주장 없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다.”²⁸⁾

건전한 자기주장이라는 지점에서 자리친과 가브리엘은 만나게 된다. 하지만 2010년 자라친 논쟁을 잘 알고 있는 이에게 이러한 접점은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자라친의 책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 때, 그는 사민당 당수로서 당원인 자라친을 출당시키려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이트지에 실은 특별기고문에서 왜 사민당이 자라친을 용인할 수 없는지를 밝혔다. 그가 자라친을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주민들의 통합력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것의 근거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우생학과 생물학적 인종주의 때문이었다.²⁹⁾ 가브리엘을 위시한 많은 독일인들에게 그것은 독일정치문화가 오랫동안 금기시했던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 인간지능이 50%에서 80% 유전된다는니, 독일인구가 무식해지는 것이 지능이 떨어지는 하류층에서 자라나고 있는 많은 아이들 때문이라는 것, 특별히 터키아동들의 떨어지는 지능이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주장들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자라친 신드롬’을 만들어내었다.³⁰⁾ 그렇다면 그는 왜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생학적 발언으로 도발했을까? 그의 책이 소통하고자 했던 것은 독일 중산층 시민들이었지만, 그는 양과 질, 아래와 위, 대중과 엘리트를 이야기하고 그 사이를 경계 짓기 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노동자계층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 상승은 불평등과 우열을 정당화하는 부르주아의 저항을 불러왔었다.³¹⁾ 그것을 ‘계층적 대중화’라 한다면, 지금은 ‘다종족적 대중화’가 독일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양한 이주민들이 하나 둘씩 ‘독일인들이’ 수성하고 있는

28)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p. 18.

29) Sigmar Gabriel, “Welch hoffnungsloses Menschenbild! Warum die SPD einen Thilo Sarrazin in ihren Reihen nicht dulden kann”, *Zeit Online* (2010.9.16.). <https://www.zeit.de/2010/38/SPD-Sigmar-Gabriel> (최초 검색일: 2019.10.27.).

30)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p. 93, 100, 316.

31) Volker Weiß, *Deutschlands neue Rechte. Angriff der Eliten – von Spengler bis Sarrazin*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1), p. 79.

자리로 올라서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의 증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올라서려는 자들에 대한 우생학적 폄하와 위기시나리오인 ‘열등한자들의 양적 지배’에 대한 독일 중산층의 저항에서 나왔다. 피와 문화를 강조하는 종족성이 내부적 통합과 이방인의 배제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로 재소환 되고 있다.

권위적이고 극단적인 과거로의 귀환은 자라친의 후예를 자처하는 대안당의 뷔요른 획케(Björn Höcke)를 위시한 보수민족주의자들의 선거 전략이 되고 있다.³²⁾ 피와 땅을 강조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많은 이방인들의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그들을 절멸로 몰아넣었던 권위적 과거에 대한 향수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에 기초한 현재의 기억문화와 정치문화를 상대화하려하고 있다.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자민족중심주의와 반이민, 반난민은 기성정치에 실망한 많은 중산층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연이은 지방선거와 연방선거, 그리고 유럽선거에서의 대안당의 성공에는 독일 중산층의 동요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독일문화, 독일인이라는 민족적 패러다임을 통해 굳건하게 쌓아 놓았던 장벽이 무너지고 밑바닥의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에 따른 동요였다. 대다수의 이민배경을 가지지 않은 독일인들, ‘진짜 독일인들’에게 이주민들과 난민들은 독일시민이 될 수도 없고, 그가 출발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주민들은 출발했던 그 자리에 머물지만은 않았다. 독일에서 이주문제는 곧 터키문제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독일주류사회의 주된 혐오대상이 되고 있는 터키이주민들 역시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2015년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총 2백 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절반인 1백 50만 명은 터키국적을 가지고

32) Volker Weiß, *Die autoritäre Revolte. Die Neue Rechte und der Untergang des Abendlands* (Stuttgart: Klett-Cotta, 2017), p. 10.

있고, 나머지는 독일 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³³⁾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며 독일 중산층에 진입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스나브뤼크 대학 이주와 상호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소의 성공을 위한 길(Pathways to Success) 연구 프로젝트는 1960년대 70년대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 특별히 터키 출신과 이주배경을 가지지 않은 자들, 흔히 ‘독일인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터키 이주민 청년들의 성공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³⁴⁾

IV. 성공한 역사로서 이주민의 역사

오랜 기간 독일을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새로운 이주민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이주환경’속에 살아간다. 독일 인구의 4분 1에 육박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착한지 오래된 자들 속에서 독일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계층적 상승을 이룬 자들이 생겨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주류사회가 이주민집단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이러한 성공스토리를 간과한다.

독일 통계자료에서도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의 중산층 진입이 확인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8년까지 전체인구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의 비율이 17,8%에서 25,5%로 괄목하게 성장했는데, 소득수준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2000유로 이상의 이주배경을 가진 봉급자의 비율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물론 저임금 분야에서도 그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난민유입에 따른 뉴커머의 증가에 기인한다 할 수

33)Susanne Schührer, *Türkeistämmige Personen in Deutschland. Erkenntnisse aus der Repräsentativuntersuchung "Ausgewählte Migrationsgruppen in Deutschland 2015"*(RAM) (Nürnberg, 2018), p. 5.

34)Christine Lang, Andreas Pott, Jens Schneider ed., *Erfolg nicht vorgesehen: Sozialer Aufstieg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und was ihm so schwer macht* (Münster, New York: Waxmann, 2018), p. 14.

있다.³⁵⁾

표4: 이주배경 유무에 따른 소득수준과 실업수준(2005, 2018)

월급(유로)	2005 전체 인구(100)		2018 전체 인구(100)	
	이주배경 무	이주배경 유	이주배경 무	이주배경 유
		82,2	17,8	74,5
500 이하	78,4	21,6	63,9	36,1
500-900	83,1	16,9	70,0	30,0
900-1300	86,4	13,6	77,6	22,4
1300-1500	86,7	13,3	79,8	20,2
1500-2000	86,4	13,6	80,2	19,8
2000-2600	89,5	10,5	80,8	19,2
2600-3200	92,0	8,0	82,6	17,4
3200 이상	92,2	7,8	85,1	14,9
실업자	72,7	27,3	58,2	41,8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05-*. Sonderausgabe der Fachserie 1 Reihe 2.2, Ausgabe 2005 (Wiesbaden, 2017), p. 24, 34;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18-* (Wiesbaden, 2019), p. 36, 51.

사실 성공적인 통합은 이주사회로서 독일에서 토포스(Topos)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계, 학계, 언론 등은 통합에 따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다. 이주민의 성공적인 통합에 대한 시선은 아주 이례적이다. 성공한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다. 오히려 독일에서 성공한 이야기는 스스로 이주 출신 배경을 가진 작가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물론 교육과 직업에서 실패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적지만,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년 동안 이주민 자녀들 중 좋은 교육을 받고 지도적인 위치에 오른 자들도 많다. 이들 중 소수는 정치인이 되어 지방과 중앙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35)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05-*, p. 24, 34;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18-*, p. 36, 51.

있다. 2017년 현재 ‘이주배경을 가진 독일인’ 국회의원의 비율은 8,2%로 2013년의 5,9%에 비해 증대되었다. 1994년 첫 연방의원을 배출한 이후 (2명), 점점 더 많은 귀화 독일인과 그 자녀들이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첫 이주배경을 가진 연방의원 중 한명이었던 첼 외체데미르(Cem Özdemir)는 2008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독일 녹색당의 당수를 역임 했다. 정치권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성공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성공케이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다. 그만큼 이주연구 역시 사회적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³⁶⁾

터키 노동자의 공식적인 모집이 시작된 후 60년, 모집이 정지된 후로는 45년이 지난 현재 주로 자영업, 특별히 요식업을 통해 터키 독일인 중산층이 형성되었다.³⁷⁾ 독일 대도시에는 터키 슈퍼마켓 체인점들과 레스토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것들은 대개 터키인들만을 대상으로 않는다. 성공한 ‘터키 독일인’인 작가 페리둔 자이모루(Feridun Zaimoğlu)는 터키 이주민들의 역사를 성공한 역사라고 주장한다: “독일 터키인들이 여기를 고향으로 느끼라고 국가로부터 요구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여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된다. 독일로 온 터키 이주민들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이다.”³⁸⁾

그럼에도 개인을 집단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은 이러한 성공을 간과한다. 때문에 자이모루는 이주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주배경을 가진 자라는 범주화를 거부한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늦게 된 독일인으로 정의한다. 그는 독일사회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독일인일 뿐이다: “이주배경을 가진 자란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것은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36)Christine Lang, *Erfolg nicht vorgesehen*, p. 10.

37)Barbara Maria Lemberger, *Migration und Mittelschicht: Eine Ethnografie sozialer Mobilität*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2019), p. 11.

38)*Ibid.*, p. 9에서 재인용.

말입니다... 나는 이방인출신인데, 나 스스로를 늦게 된 독일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터키인 부모를 가진 독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³⁹⁾

독일국적을 획득하고, 영구적으로 독일사회에 정착한 ‘이주배경을 가진 독일인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곳은 중간지대일지 모른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같은 크기의 책무를 다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최소치는 ‘계층적 중원’에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시민성 논의가 계층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의 문제, 즉 이주민이 ‘실질적인 시민’이 되는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종족성을 극복하는 트랜스내셔널 시민성 내지 세계시민성은 실효성 없는 말장난에 그칠 수 있다. 한때 한계이자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시민성과 계급성의 밀착으로 특징지어진- ‘독일적 시민성’이 이제 이주민의 시민성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hboell@dnue.ac.kr

주제어(key words):

중산층(middle class), 이방인혐오(xenophobia), 시민(citizen), 이주민(migrants)

(투고일: 2019. 10. 10, 심사일: 2019. 11. 12, 게재확정일: 2019. 11. 12)

39)“Schriftsteller Feridun Zaimoglu >>Bei dem Wort Migrationshintergrund bekomme ich Kopfschmerzen<<”, *Deutschlandfunk Kultur* (2018.7.4.).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schriftsteller-feridun-zaimoglu-bei-dem-wort.1008.de.html?dram:article_id=421952 (최초 검색일: 2019.6.13.).

<국문초록>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

이 용 일

이 글은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를 다룬다. 난민위기 이후 독일 시민사회의 위기는 독일 중산층의 극우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때 독일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실질적인 시민으로서 중산층의 일부가 반이민과 반난민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의 지지자들이 되었다. 주된 이유로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통제력을 잃은 정치권, 그 결과로서 심화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중산층의 약화 등이 언급되어진다. 그러나 집단적 혐오와 폭력을 야기한 중산층의 불안은 이주민들의 일부가 자신들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사실에도 연유한다.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중산층으로 올라섰고 잘 통합되었음에도, 주류사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주민들이 출발했던 가장 밑바닥에 가 있다. ‘실질적인 시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독일사회의 부를 갉아먹는 기생층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주류적 시각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Abstract>

The crisis of civil society and xenophobia

Lee, Yong-II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crisis of civil society and xenophobia in Germany. The contemporary crisis of German civil society is deeply linked to the political change of the German middle class. As a de facto citizen who once supported German democracy, some of the middle class became supporters of the Far Right Party, which claimed anti-immigrants and anti-refugees.

Neoliberalism, the retreat of the welfare state, deepening inequality and the fall of the middle class were thought to have exacerbated the crisis. But the middle class anxiety that caused collective hatred and violence also stemmed from the fact that some of the migrants had risen to their positions. Although a few immigrants have risen economically to the middle class and are well integrated, mainstream society does not recognize this. Their gaze is still at the very bottom of the settlers' departures. Despite becoming "real citizens," migrants are still seen as parasites that eat up the wealth of German society. This mainstream view makes the social inclusion and integration of migrants difficult.

참 고 문 헌

1. 사료

“Schriftsteller Feridun Zaimoglu >>Bei dem Wort Migrationshintergrund bekomme ich Kopfschmerzen<<”, *Deutschlandfunk Kultur* (2018.7.4.).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schriftsteller-feridun-zaimoglu-bei-dem-wort.1008.de.html?dram:article_id=421952 (최초 검색일: 2019.6.13.).

Michael Kniess, “Rechtes Gedankengut in Deutschland- Studie: Der Mitte geht der Kompass verloren”, *ZDF Nachrichten* (2019.4.25.).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mitte-studie-die-wichtigsten-erkenntnisse-100.html> (최초 검색일: 2019.11.1.).

Sigmar Gabriel, “Eine Studie und ihre bewusste Fehlinterpretation”, *Der Tagesspiegel* (2019.4.27.).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von-wegen-verlorene-mitte-eine-studie-und-ihre-bewusste-fehlinterpretation/24263736.html> (최초 검색일: 2019.10.17.).

_____, “Welch hoffnungsloses Menschenbild! Warum die SPD einen Thilo Sarrazin in ihren Reihen nicht dulden kann”, *Zeit Online* (2010.9.16.). <https://www.zeit.de/2010/38/SPD-Sigmar-Gabriel> (최초 검색일: 2019.10.27.).

2. 단행본

Andreas Zick, Beate Kupper, Wilhelm Berghan ed., *Verlorene Mitte - Feindselige Zustände. Rechtsextreme Einstellungen in Deutschland 2018/19* (Dietz, J H: Bonn, 2019).

- Barbara Maria Lemberger, *Migration und Mittelschicht: Eine Ethnografie sozialer Mobilität*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2019).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 Zentrale Ergebnisse* (Nürnberg, 2016).
- _____, *Das Bundesamt in Zahlen 2017. Asyl, Migration und Integration* (Nürnberg, 2018).
- Christine Lang, Andreas Pott, Jens Schneider ed., *Erfolg nicht vorgesehen: Sozialer Aufstieg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und was ihn so schwer macht* (Münster, New York: Waxmann, 2018).
- Dolf Sternberger, *Verfassungspatriotismus* (Frankfurt am Main: Insel, 1990).
- M. Rainer Lepsius, *Demokratie in Deutschland: Soziologisch-historische Konstellationsanalys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Press-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ndeskanzler Brandt. Regierungserklärung des zweiten Kabinetts Brand-Scheel vom 18. Januar 1973* (Bonn, 1973).
- Statistisches Bundesamt,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18-* (Wiesbaden, 2019).
- Susanne Schührer, *Türkeitstämmige Personen in Deutschland. Erkenntnisse aus der Repräsentativuntersuchung "Ausgewählte Migrationsgruppen in Deutschland 2015"*(RAM) (Nürnberg, 2018).
- 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Wie wir unser Land aufs Spiel setzen* (Mü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2010).
- Volker Weiß, *Deutschlands neue Rechte. Angriff der Eliten - von Spengler bis Sarrazin*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2011).
- _____, *Die autoritäre Revolte. Die Neue Rechte und der*

Untergang des Abendlands (Stuttgart: Klett-Cotta, 2017).

3. 논문

이용일, 「독일의 뉴라이트와 복지국가위기론 -틸로 자라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서양사론』, 129권(2016).

이용일,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 인력모집정책: 대기업 중심의 독일식 대량생산을 위한 대규모 외국인고용 1955-1973」, 『서양사론』, 85(2005).

Christine G. Krüger, “In der Tradition der bürgerlichen Wohlfahrt? Freiwillienarbeit von Jugendlichen nach 1945”, Gunilla-Friederike Budde, Eckart Conze, Cornelia Rauh ed., *Bürgertum nach dem bürgerlichen Zeitalter: Leitbilder und Praxis seit 19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Dolf Sternberg, “Die Bürgerlichkeit”, *Die Wandlung* 3. Jg. 1948 Heft 3.

Hans-Uwe Bach i.a., “Der Arbeitsmark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5/76 (insgesamt und regional) und die Auswirkungen beschäftigungspolitischer Maßnahme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Sonderausgabe, 9. Jg., 1976).

Helmut Schelsky, “Die Bedeutung des Schichtungsbegriffs für die Analyse der gegenwärtigen deutschen Gesellschaft”, Helmut Schelsky, *Auf der Suche nach Wirklichkeit. Gesammelte Aufsätze* (Düsseldorf, Köln: Eugen Diederichs, 1965).

Jens Hacke, “Bürgerlichkeit und liberale Demokratie”, Gunilla-Friederike Budde, Eckart Conze, Cornelia Rauh ed., *Bürgertum nach dem bürgerlichen Zeitalter: Leitbilder und Praxis seit 19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Michael Schneider, “Der Kampf um die Arbeitszeitverkürzung von der Industrialisierung bis zur Gegenwart”,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35(1984).

Richard Gebhardt, "Das >>Sarrazin-Syndrom<< Ein Bestseller als Krisenindikator", *Das Argument*, 289(2010).

Wilhelm Heitmeyer, "Rohe Bürgerlichkeit. Bedrohungen des inneren Friedens", *Wissenschaft & Frieden*, 2(2012).